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평가

오태현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차 례 ● ● ●

1. 최근 프랑스의 경제·정치 현황
2.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분석
3. 프랑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
4. 평가

주요 내용 ● ● ●

- ▶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2013년 0.3%를 기록하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유로존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① 더딘 성장률 회복 ②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③ 낮은 기업 수익률 ④ 순국제투자 감소 ⑤ 글로벌 경쟁력지수 하락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
 - 경기침체 후 회복속도는 경쟁국인 독일은 물론 같은 유로존 국가인 벨기에보다 느리며, 세계시장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이 2011년 기준(최근 5년간) 11.2%나 하락함.
 - 세계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프랑스 비금융기관 기업 수익률은 총부가가치 대비 28%로 유로존 평균(37%) 및 독일(40%)보다 낮으며, 2006년까지 플러스를 기록하던 순국제투자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2012년에는 GDP 대비 -21%를 기록함.
- ▶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크게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으로 구분됨.
 - 가격요인으로 ①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노동비용 ②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 ③ 비금융 자산가격 상승이 있음.
 - o (단위노동비용과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 프랑스의 단위노동비용은 경쟁국인 독일은 물론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로 인해 프랑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프랑스의 수출품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출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남.
 - o (비금융 자산가격 상승) 빌딩 및 건축구조물, 토지의 가격이 유럽 주요국에서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운영의 고비용을 초래함.
 - 비가격요인으로 ① 노동시장의 경직성 ② 중·고위기술력 및 R&D 투자 미흡이 있음.
 - o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단위노동비용의 상승과 높은 해고비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 o (중·고위기술력 및 R&D 투자 미흡) 프랑스의 중·고위기술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R&D 투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o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경쟁력 약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1. 최근 프랑스의 경제 · 정치 상황

■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0.3%를 기록하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유로존의 경 회복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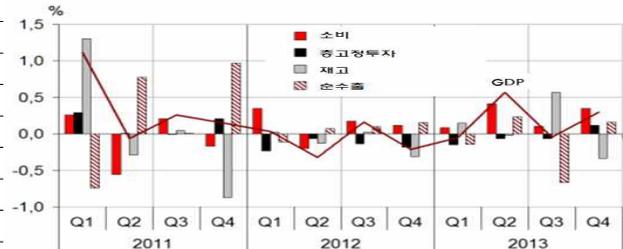
- 2012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2013년 중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에는 민간소비와 순수출의 기여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표 1. 프랑스 경제의 주요 지표

	2009	2010	2011	2012	2013
GDP	-3.1	1.6	2.0	0.0	0.3
민간소비	0.4	1.5	0.5	-0.3	0.4
정부지출	2.6	1.8	0.4	1.4	1.7
투자	-10.4	1.2	3.0	-1.2	-2.1
수출	-11.9	9.0	5.6	2.5	0.6
수입	-9.5	8.6	5.3	-0.9	0.8
재정수지	-7.5	-7.1	-5.3	-4.8	-4.2
경상수지	-1.3	-1.4	-1.7	-2.2	-1.5

자료: Oxford Economics(2014. 3); Eurostat(2014. 4); EU 집행위원회(2014. 2)

그림 1. 프랑스 GDP 부문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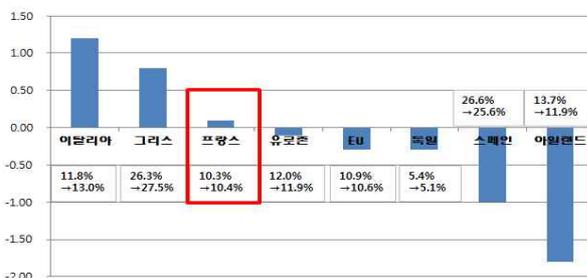


자료: Insee(2014. 2).

- 높은 실업률과 경상수지 악화, 높은 비금융기관 채무는 프랑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여줌.
- 실업률은 2014년 2월 10.4%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EU 주요국에서 실업률이 개선된 것과 대비됨.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재정위기국에서는 개선되고 있으나, 프랑스는 여전히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¹⁾ 무역수지 적자가 주요 원인임.
-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서 기인함.

그림 2. 유로존 및 회원국의 실업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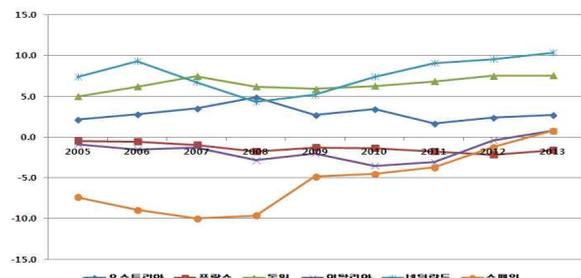
(단위: %포인트)



주: 2013년 2월 대비 2014년 2월 기준 변화율(단, 그리스는 2012년 12월 대비 2013년 12월 기준)
자료: Eurostat(2014. 4).

그림 3. 유로존 주요국의 경상수지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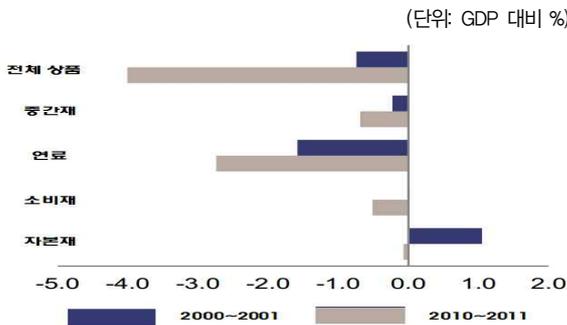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1) 프랑스의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 흑자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적자규모가 지속됨. 2009년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폭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큼. 2013년의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는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프랑스의 비금융기관 채무는 2011년 기준 GDP 대비 103.8%로, 유로존(99.0%)을 소폭 상회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인 마킷(Markit)에 따르면, 2014년 4월 프랑스의 종합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5를 기록하면서 3월의 민간경기 회복세(51.8)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함.
- 제조업 PMI는 50.9를 기록하면서 3월(52.1) 및 시장전망치(51.9)를 하회하고, 서비스업 PMI 또한 50.3을 기록하면서 3월(51.5) 및 시장전망치(51.4)를 하회함.
- 독일의 경우 같은 기간 중 종합 PMI는 56.3으로 전월(54.3)보다 상승했으며, 제조업 PMI(54.2)와 서비스업 PMI(55.0) 모두 전월보다 상승함.

그림 4. 프랑스의 상품무역수지



자료: Eurostat(2014).

그림 5. 프랑스의 종합구매자관리지수(PMI) 추이



자료: Markit(2014. 4).

- 신용평가 기관들은 일제히 유럽 재정위기과정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함.
- 2013년 11월 8일 S&P는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으며, 피치 역시 2013년 7월 중에서 이미 “AAA”에서 “AA+”로 강등함.
- S&P는 강등 이유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 및 구조 개혁, 상품 및 서비스 시장, 노동시장 개혁 조치들이 프랑스 중기 경제성장률 제고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으며, OECD와 IMF도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요구했음.

표 2. 유럽 주요국의 신용등급

	S&P		Moody's		Fitch		S&P / Fitch	Moody's	평가 범위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프랑스	AA (13.11.08)	긍정적 (13.11.08)	Aa1 (12.11.19)	부정적 (12.11.19)	AA+ (13.07.12)	긍정적 (13.07.12)	AAA AA+ AA AA-	Aaaa Aa1 Aa2 Aa3	투자등급
독일	AAA (92.07.27)	긍정적 (92.07.27)	Aaa (97.03.07)	부정적 (12.07.23)	AAA (94.08.10)	긍정적 (94.08.10)	A+ A A-	A1 A2 A3	
이탈리아	BBB (13.07.09)	부정적 (13.07.09)	Baa2 (12.07.13)	부정적 (12.07.12)	BBB+ (13.03.08)	부정적 (12.01.27)	BBB+ BBB BBB-	Baa1 Baa2 Baa3	
스페인	BBB- (12.10.10)	긍정적 (13.11.29)	Baa2 (14.02.21)	부정적 (12.10.16)	BBB (12.06.07)	긍정적 (13.11.01)	BB+ BB BB-	Ba1 Ba2 Ba3	투자부위등급
							B+ B B-	B1 B2 B3	
							CCC CC C	Caa Ca C	

자료: 각 신용평가기관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올랑드 대통령은 2014년 3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직후 국면전환을 위한 개각을 단행하였으며, 신임총리와 재무장관은 경제회복 및 구매력 증진을 위한 경제정책 및 경쟁력 제고를 강조함.
- 2014년 3월 23일과 30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원인은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이며, 이로 인해 지방선거 직후 올랑드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함.

- 프랑스 전국 약 3만 6천 개 자치단체의 장(maire)과 지방의원(conseil municipal)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전체 득표율은 우파 49%, 좌파 42%를 기록함. 특히 그동안 좌파 중심이었던 지자체에서 우파출신 단체장이 선출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좌파의 패배가 두드러짐.
- 인구 10만 명이 넘는 41개 지자체의 경우 우파(2008년: 12개 → 2014년: 22개)가 좌파(2008년: 29개 → 2014년: 19개)보다 더 많은 단체장을 보유
- 더욱이 극우세력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10개 지자체에서 단체장으로 당선됨으로써 2008년 당시 선거에서 한 명의 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평가
- 프랑스 현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집권당의 패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선거패배 후 올랑드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함.
 -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현 내무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미셸 사팽(Michel Sapin) 노동부 장관이 재무장관으로, 아르노 몽트부르(Arnaud Montebourg) 산업부 장관이 경제장관으로 임명됨.
 - 경제부처 관련 신임 장관들은 친기업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정책 추진을 언급함.

2.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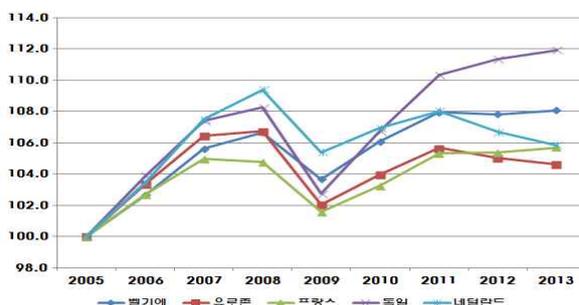
가.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 우려

■ (① 더딘 경제 성장을 회복) 2005년 이후 프랑스 경제는 독일 경제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의 기간을 비교하면 정반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

-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한 번의 경기침체 이후 독일, 벨기에 등이 빠르게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경제회복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2000년대 초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경제성장률에서 프랑스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0년대 초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빠른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구조가 마련됨.
- 2009년 말 이후 독일과 프랑스 경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회복 속도에서 차이를 보임.

그림 6. 재정위기 전후 대비 주요국의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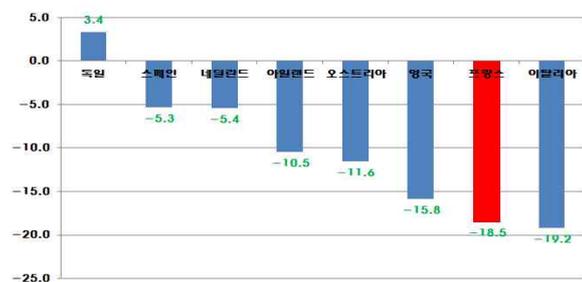
(단위: 2005=100)



자료: Oxford Economics,

그림 7. 전 세계 수출에서 국별 비중 증감률

(단위: 2005년 대비 2013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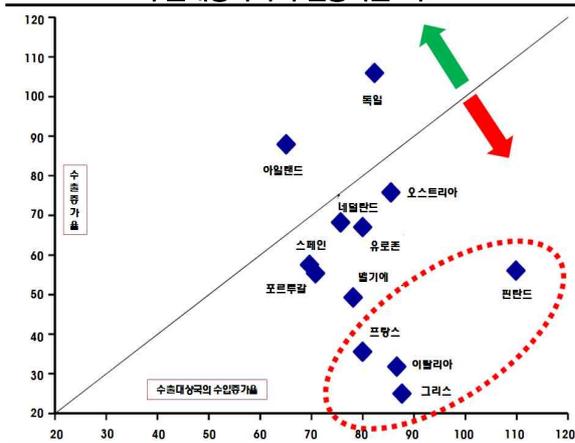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 (②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2000년대 이후 프랑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기준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이 11.2% 하락함.

- 프랑스는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스와 함께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도 큰 폭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기록함.
- 1999년부터 2011년 기간 중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율과 수출국의 수출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독일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 * 핀란드는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율에 비해 수출증가율이 낮으나 수출증가율은 벨기에와 유사한 수준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보다는 수출성도가 좀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 * 그리스의 낮은 제조업 경쟁력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수출증가율 하락세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997년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2년에는 무역수지 적자는 GDP 대비 -1.9%를 기록함. 2005년 대비 2013년 기간 중 프랑스의 수출은 18.3% 하락하였으며, 이는 이탈리아와 함께 높은 수준임.
- 1999년 대비 2011년 프랑스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과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상위 6대 품목 중 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증가율 실적이 좋지 못했음.
- 프랑스 수출에서 90%를 차지하는 상위 4개 품목의 수출증가율은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율의 0.5~0.6에 그쳤으며, 서비스 수출에서도 유사한 격차를 기록함.
- 프랑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상품과 서비스가 대조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바,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관광부문에 의해 2005년보다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함.
 - * 서비스 시장 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그림 8. 1999년 대비 2011년 주요국 수출증가율과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율 비교



자료: Deutsche Bank(2013, 2).

표 3. 프랑스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성도(Export Performance)

	프랑스 수출 점유율		같은 기간 중 변화율		성과 격차
	2011	1999	프랑스 수출(A)	수출대상국 수입(B)	
상품					
기계	38	45	68	142	0.5
제조	23	25	85	147	0.6
화학	17	14	147	258	0.6
식품	12	12	100	161	0.6
광물	8	2	568	516	1.1
오일	3	2	171	357	0.5
서비스					
관광	32	38	72	107	0.7
교통	23	24	101	165	0.6
기타	45	38	142	196	0.7

주: 성과격차는 프랑스 수출증가율을 수출대상국의 수입증가율로 나눈 것임(A/B).
자료: Deutsche Bank(2013, 2).

■ (③ 낮은 기업 수익률) 프랑스 비금융기관 기업이익은 총부가가치 대비 28%로 유로존 주요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투자 여력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함.

- 유로존 평균 기업 수익률이 37%이고 독일이 약 40%인 점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기업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프랑스와 함께 경쟁력 약화가 제기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기업이익은 30%대 후반인 바, 프랑스 기업의 낮은 수익률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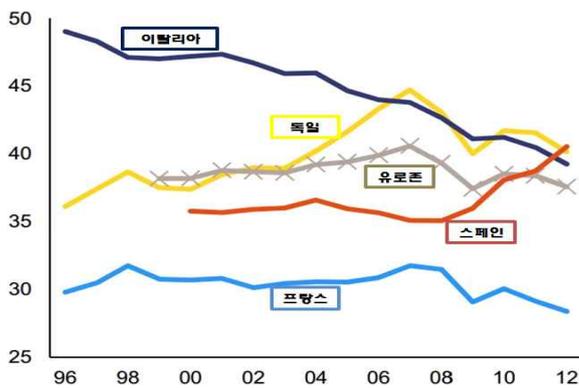
- 특히 제조업의 기업 수익률은 2012년 중반 20%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④ 순국제투자 감소) 2006년까지 플러스를 기록하던 순국제투자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2012년 기준 GDP 대비 21%를 기록함.

- 프랑스의 FDI 규모는 전 세계 15위에 해당할 만큼 아직까지는 투자매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수년간 순위가 하락(2008년: 7위)하면서 투자매력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3년 프랑스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012년 대비 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 프랑스의 순국제투자대조표상 수치가 아직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프랑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매력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프랑스의 순국제투자 감소가 유지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순국제투자 적자는 GDP 대비 40%에 이를 것으로 평가됨.

그림 9. 유럽 주요국 기업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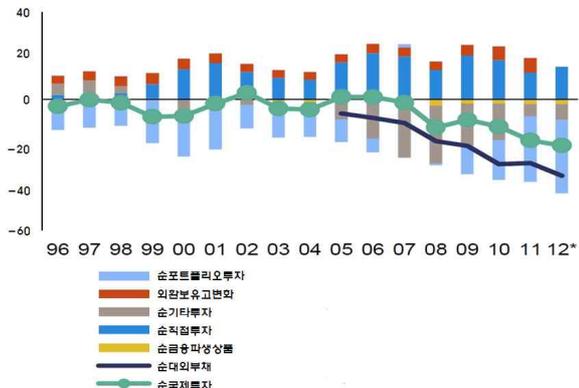
(단위: 총부가가치 대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3).

그림 10. 순국제투자대조표(NIIP)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3)

■ (⑤ 하락하는 경쟁력지수)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쟁력지수는 2008~09년 이후 하락세에 있으며, 같은 기간 하락한 스페인보다도 하락폭이 큼.²⁾

- 2013~14년 프랑스의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23위로 최근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독일은 유럽 재정 위기 과정에서 오히려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임.
- 2013년에 발표된 WEF의 경쟁력 평가에서 프랑스의 기업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노동규제이며, 다음으로 세율, 조세규제, 자금조달의 용이성, 혁신능력의 미흡, 비효율적인 행정주의 등이 제기됨.

2) WEF는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경쟁력지수를 발표함. 2013년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3대 분야, 12개 중간부문, 111개 세부항목(설문: 80, 통계: 31)으로 구성되어 있음. 3대 분야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임. 12개 중간부문은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기술수용 적극성, 시장규모, 기업활동 성숙도, 기업혁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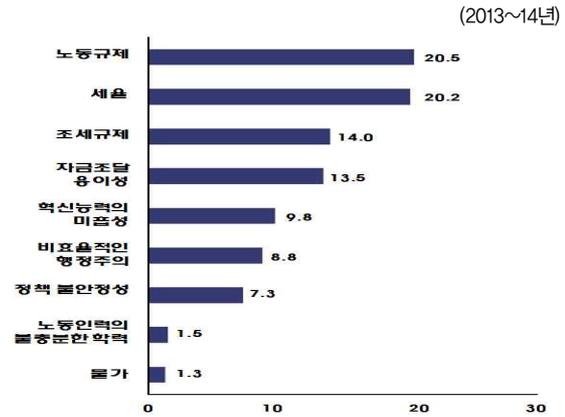
- 노동규제는 조사대상 148개국 중에서 144위를 기록했으며, 노사관계는 135위, 정부규제부담이 130위를 기록함.

표 4. WEF 글로벌 경쟁력지수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동기전 순위별
독일	7	7	5	6	6	4	↑(3)
네덜란드	8	10	8	7	5	8	(-)
프랑스	16	16	15	18	21	23	↓(7)
스페인	29	33	42	36	36	35	↓(6)
이탈리아	49	48	48	43	42	49	(-)

자료: World Economic Forum.

그림 11. 프랑스 기업환경 문제점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3).

나.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 원인 분석

■ (가격요인 ①: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노동비용) 프랑스의 단위노동비용이 주변국(단 이탈리아를 제외)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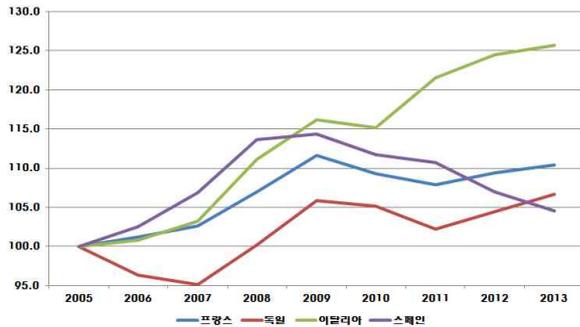
- 프랑스 단위노동비용은 2005년 이후 약 17%가 증가했으며, 이는 독일(10%), 스페인(5%), 아일랜드(2%)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
- 2013년 기준 프랑스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32.6유로로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유로지역 평균보다 5.6유로 높은 수준임.
- 단위노동비용 중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
- 프랑스에서 전체 노동비용 중 100유로당 42유로가 사회적 비용으로 지급되며, 이는 독일(34유로), 영국(26유로), 미국(20유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수출상품의 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1.1로 이탈리아(0.8)와 독일(0.2), 스웨덴(0.1)보다 크기 때문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21개 유럽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013년 기준 시간당 9.43유로, 월 1,430.22유로이며,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³⁾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53유로, 월 1,445.38유로이며, 이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median)의 60%를 상회함.⁴⁾

3) Koubi & Lhommeau(2007)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서 실질임금의 0.4% 인상으로 이어짐.

4) 프랑스의 최저임금제(SMIG: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는 1950년에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2013년 2월 7일 개정됨.

그림 12.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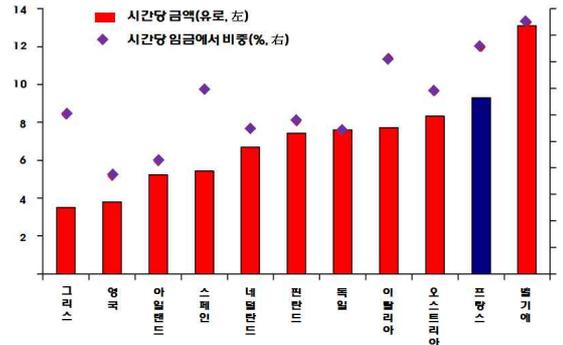
(단위: 2005=100)



자료: Oxford Economics.

그림 13. 주요국 제조업 고용주의 사회보장부담금

(단위: 시간당 유로, 시간당 임금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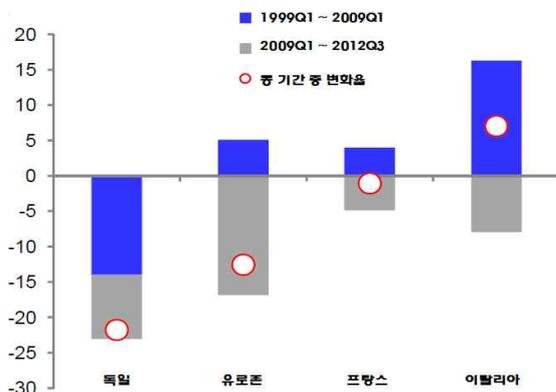
자료: Oxford Economics.

■ (가격요인 ②: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 프랑스의 실질실효환율이 이탈리아와 함께 유로존 평균은 물론 독일보다 고평가되면서 수출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됨.

- 1999년 1/4분기부터 2012년 3/4분기까지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이 약 22%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실질실효환율은 약 2% 하락하는 데 그침.
- 2009년 이후 프랑스의 실질실효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락폭은 독일, 이탈리아와 비교하여 크지 않음.
- 프랑스의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비교하여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효과 및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독일은 생산조립단계 공정만을 해외로 이전하고 품질과 관련된 핵심부분은 본국에서 컨트롤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개선 및 고부가가치 장에서의 점유율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음. 반면 프랑스는 제조업 전체 공정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프랑스 기업이 판매하지만 더 이상 프랑스 제품(Made in France)으로 인정받지 못함.⁵⁾

그림 14. 단위노동비용 기준 실질실효환율(R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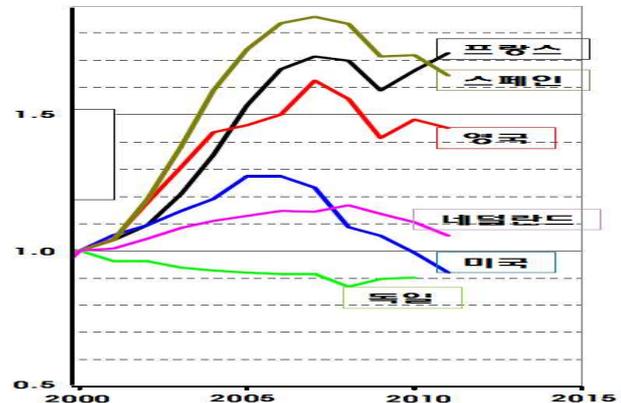
(단위: 누적 변화율, %)



자료: Deutsche Bank(2013, 2).

그림 15. 유럽 주요국 부동산 가격 추이

(기준: 2000년 = 1)



자료: Friggitt(2012).

5) European Commission(2012).

■ **(가격요인 ③: 비금융 자산가격 상승)** 유럽의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2008년을 전후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의 비금융 자산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고비용 구조를 더욱 악화시킴.

- 비금융 자산가격의 상승은 투자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1995년 이후 프랑스의 비금융 자산가격의 추이를 보면 기계류, 설비 및 무형고정자산의 가격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빌딩, 토지 등의 자산가격은 빠르게 상승함.

* 총부가가치 대비 빌딩 및 구조물의 비중: 프랑스 (2000년: 121.4 → 2008년: 137.2 → 2011년: 154.8)
독 일 (2000년: 127.2 → 2008년: 121.9 → 2011년: 125.5)
네덜란드(2000년: 144.4 → 2008년: 141.3 → 2011년: 1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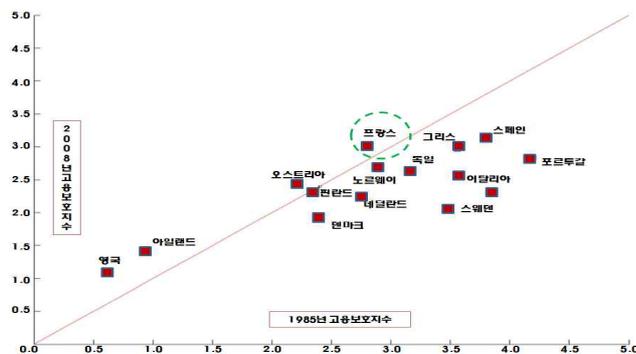
■ **(비가격요인 ①: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킴.

- 2008년 OECD의 고용보호(EPL) 평균지수는 1.89를 기록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스페인, 그리스와 함께 약 3.0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동경직성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음.⁶⁾

○ 높은 고용보호는 결국 해고나 상호합의에 따른 퇴직 등에 있어서 고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성이 악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함. 결과적으로 노동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됨.

그림 16. 고용보호지수(EPL) 변화

(기준: 1985년 대비 2008년)



주: 0은 규제가 약하고, 5는 규제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45도선 아래 위치하는 것은 노동경직성의 완화를 의미.
자료: ILO(2013).

■ **(비가격요인 ②: 중·고위기술력 및 R&D 투자 미흡)** 경쟁국인 독일, 이탈리아 기업의 중·고위기술력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비중이 줄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R&D 투자지출이 경쟁국보다 낮다는 사실에서 확인됨.

- 프랑스 기업의 중·고위기술력이 1999~2007년 사이 40%에서 46%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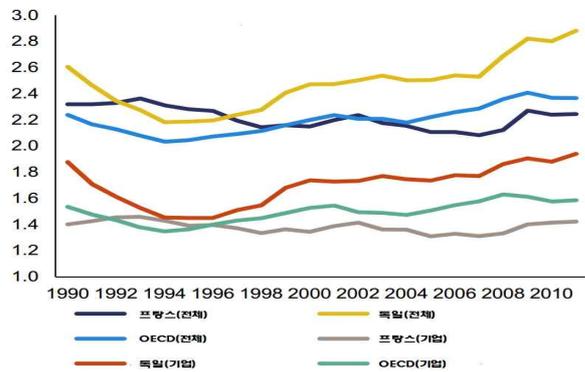
6) 고용보호지수(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는 노동시장의 보호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은 규제가 약한 것을, 5는 규제가 강한 것을 의미함.

2010년 41%로 하락

- 프랑스의 수출시장 포지션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혁신국가들의 선점으로 인해, 중급시장에서는 낮은 노동비용을 강점으로 하는 신흥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이중경쟁에 빠져 있는 상황임.
 - * 중·고위기술력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의약 부문에서의 프랑스 기술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고위기술력의 격차는 교육제도에서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현재 교육 내용이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로 하는 기술력을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 17. R&D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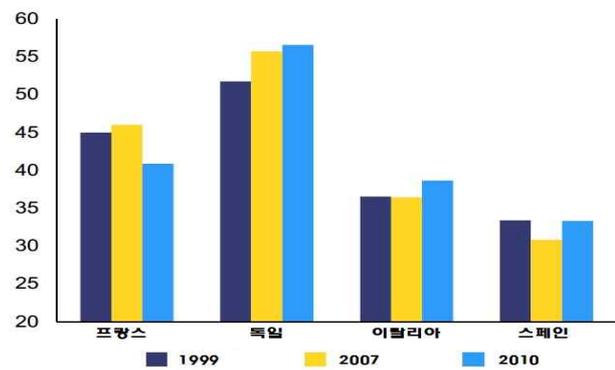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그림 18. 중·고위기술부문 비중

(단위: 총부가가치 대비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3).

- 2011년 기준 프랑스의 R&D 투자는 GDP의 2.2%로 독일(2.9%), 스웨덴(3.4%), 핀란드(3.8%), 미국(2.8%)보다 낮았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의 R&D 투자는 독일 및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으나, 민간부문의 R&D 투자는 독일(1.9%)보다 낮음(프랑스: 1.4%).
- EU 집행위원회는 혁신부문에서 프랑스를 EU회원국 중 10위로 평가했으며, 특히 삼국특허(Tridic patents) 비중은 59%로 독일(84%), 일본(85%)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⁷⁾
- 프랑스의 혁신 관련 평가가 낮은 원인과 관련하여 Ciriaci(2011)는 작은 기업규모, 직원 중 연구자(researcher)의 낮은 비중,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이 어려운 기업환경 등을 제기함.
- 수출과 R&D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Brugel 2012)에 따르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 증대를 위한 R&D의 중요성을 반증함.

3. 프랑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

■ (성장률·경쟁력·고용 제고협약) 2012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갈루아 보고서를 바탕으로 프랑스 산업의 경쟁력

7) 삼국특허는 EU, 미국, 일본에서 모두 동일 특허인이 동일한 특허에 대해 출원한 것을 의미함.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함.⁸⁾

- 이 전략은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8대 분야 35개 과제를 제시함.(부록 표 1 참고)⁹⁾
 - (산업경쟁력의 세계일류화) 최우선 과제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기조 유지, 낮은 에너지 가격, 수출과 혁신 강조
 - (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혁신 클러스터를 통한 지방의 활력 도모
 - (시장친화적·미래지향적 제도개선) 산업수요와 괴리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개혁 및 교육제도와 R&D 제도의 개편
 - (새로운 유럽 산업정책 추진) 보편화된 유럽 산업전략이 반영된 혁신 프로그램 개발
 - (신사회협약 체결) 고용안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간 대타협 추진

■ (R&D 투자 지원) 2013년 2월 프랑스 정부는 중장기 R&D 전략인 ‘France Europe 2020’을 통해,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R&D 정책 추진을 통한 기업의 산업 경쟁력 및 경제재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¹⁰⁾

- 정부는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R&D 투자가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부처간 장벽제거는 물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위 전략은 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지원전략인 Horizon 2020에 따라 회원국별로 마련됨.
- 위 전략은 R&D 협력, 기술연구 장려, 디지털 트레이닝 및 인프라 개발, 혁신 및 기술의 확산, 국내외에서의 R&D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음.
 - R&D 투자지원은 바이오, 정보통신, 우주항공, 나노, 에너지, 기초과학 등 기술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직접적인 자금지원과 간접적인 세액공제 방식으로 구분함.

■ (기업부문 규제개혁) 2013년 7월 프랑스 정부는 행정선진화각료회의(CIMAP: 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a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를 통해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함.

- 2012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신속한 규제개혁 처리를 위해 행정선진화각료회의를 수립함.
 - 의회입법이 아닌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하며 2014년 상반기까지 201개 과제별 실행계획과 행정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규제개혁과제는 크게 기업·삶의 질·시민생활·행정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기업부문) 창업 및 기업인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부지원 강화, 사회보장부담금 계산 기준의 단일화, 관세납부절차 간소화, 수출기업의 행정처리 업무 통합 및 규정 간소화 등이 있음.
 - (행정부문) 인허가 신청 후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기관의 회신이 없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기관의 효율화를 제고

8) 갈루아 보고서(Pacte pour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française)는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European Aerospace and Defence Companies)의 CEO인 루이 갈루아(Louis Gallois)에게 의뢰하여 만들어짐. 이 보고서는 총 5개 분야 22개의 방안을 담고 있으며, 경쟁력 약화와 투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의 경쟁력 단계적 상승 및 충격적 조치 ② 기업이익의 최적화 ③ 산업정책 수단 개선 ④ 유럽 산업정책을 위한 전략 ⑤ 새로운 사회적 협약의 창안.

9) Premier Ministre(2012), Pacte national pour la croissance,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10) 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2013), France Europe 2020: A Strategic Agenda for Reserach, 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산업 육성)** 2013년 9월 프랑스의 산업서비스경쟁력위원회(DGCIS: La Direction Générale de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et des Services)는 산업역량을 집중할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he New Face of Industry in France'를 발표함.

- 미래산업 육성정책은 프랑스 경제의 문제로 지목되는 높은 실업률 무역적자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Made in France'를 통한 시장 주도를 목적으로 함.
 -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디지털 등 총 4개 분야 34개 산업에 대해 10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3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함.
 - * McKinsey는 455억 유로의 부가가치 발생 및 179억 유로의 수출액 증가는 물론 48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이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산업공동화와 같은 프랑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됨.
 - 2009년 이후 프랑스 리턴 기업 수는 44개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중 267개는 해외로 산업시설을 이전함.

■ **(책임연대 협약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올랑드 대통령이 201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책임연대 협약(Pacte de responsabilité et de solidarité)을 중기재정계획에 구체화함으로써 고용비용 감축, 기업 세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함.

- 100억 유로 상당의 고용비용 감축
 - 고용주가 최저임금자를 고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부담금(실업보험 부담금 제외)을 폐지
 - 최저임금 3.5배까지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가족수당 부담금을 현행 5.25%에서 1.8%포인트 인하
 - 자영업자의 가족수당 부담금 3%포인트 인하
- 기업 세부담 경감
 - 연매출액 76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부과하던 사회연대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de solidarité des sociétés)을 폐지하고, 법인세에 적용되던 할증세(연간 매출액 2.5억 유로 기업에 대해 법인세 33.3% 외에 영업이익의 10.7% 부과) 폐지, 2017년부터 점차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2020년까지 28%로)

4. 평가

■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는 상존)** 다양한 경쟁력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프랑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나, 현재 정부가 제안한 정부정책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경쟁력 제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는 단기간에 나타난 것이 아닌 2000년 초부터 진행된 만큼 경쟁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함.
- 프랑스 정부의 단호한 정책대응과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음.

- 시장 및 전문가들은 그동안 프랑스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놓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 노력 우선시)** 프랑스 정부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경쟁력 약화 원인 분석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기업의 R&D 투자 확대 지원, 고위기술력이 접목된 제품군 개발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요구됨.
- 프랑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미미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 노력이 필요함.

글상자 1.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협약(2013년 1월 11일)

- 프랑스 정부는 5개 근로자 단체(노동총동맹, 민주노동연합, 노동자의 힘, 프랑스기독교도 노동자동맹, 프랑스 사무직 중심 노조연맹), 3개 고용자 단체(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 총연합 등)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 강화 및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전국단체협약(ANI: 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을 체결
 - (고용안정성) 계약직에 대한 고용주 부담 실업보험료율 인상, 보충적 건강보험 일반화, 재취업자 실업급여 계속지급, 직업 훈련계좌 이전 보장
 - (노동유연성) 노조와의 협의하에 고용유지협약 체결, 해고절차 간소화, 근로자 내부배치 유연화 등
- 이 협약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노동유연성에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음.

- 기업의 조세부담률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구조 (tax structure)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 프랑스 재정적자(2013년 GDP 대비 4.2%)가 아직 EU집행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3%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약화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OEC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잡한 조세제도는 집행과정에서의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는 만큼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 침체기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경기회황기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경제 펀더멘털로의 전환이 필요함.
- 경기 하락폭을 억제한 공공부문의 높은 지출은 지출규모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공공지출 개선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고 이를 성장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인적역량 개선을 위해 교육 불평등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질적 개선 등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OECD(2012)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따르면 교육의 질과 학교발전 항목에서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남. **KIEP**

부록 표 1. 프랑스 '성장경쟁력고용을 위한 국가 전략'

분야	실천과제
경쟁력 및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	① 3년 내 연 200억 유로 규모의 세액 공제(투자 및 고용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① 5억 유로 중소기업 지원
	② 중소기업 지불유예 연장
	③ 2013년까지 공공투자은행(BPI) 설립
	④ 2013년 초 저축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
	⑤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기능 강화
	⑥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혁신을 통한 프리미엄 시장 진출	①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② IT 기술개발 및 활용률 제고
	③ 클러스터 기능 재편과 차별화 추진
산업생태계 조성	① 산업협의체를 통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협력 강화
	② 협력업체 지원방안 추진
	③ 경영이사회 및 감독이사회에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 대표 포함
국제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① 공공투자은행(BPI)을 통해 1,000개 중소기업 보증 지원
	② 수출선도국가 수준의 수출금융지원
	③ 3년 내 종합무역상사 자원봉사자 25% 확대
	④ 유명인 또는 대형 프로젝트 투자자에 대한 특별비자 발급
	⑤ 'Made in France' 브랜드 가치 제고
	⑥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강점 유지 및 전국적 광대역통신망 구축
미래준비와 고용과 직결되는 교육훈련 기회 제공	① 2013년부터 '직업별 자격증' 제도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 실시
	② 2013년부터 10개의 지역 인사이동 플랫폼을 마련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인력고용 단독 창구역할 구현
	③ 기술전문교육기관에 기업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활동 체계화
	④ 2017년 견습생 50만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내 견습생 고용촉진
	⑤ 노동조합대표들에게 개인별 직업훈련 구좌신설을 위한 방식협의 제안
	⑥ '2020 국제과건' 정책을 통해 전문·기술 분야를 중점으로 해외연수 증대
기업경영환경 개선	① 임기 5년간 5가지 핵심 산업정책 기조 유지
	② 단기간 기업활동 단순화를 위한 5가지 계획실현
	③ 정부차원의 조세를 포함한 '중소기업 테스트' 장치를 마련
	④ 2013년 6월까지 조세할당 예산제도 개혁
공공정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① 프랑스 기업의 안정된 재정환경 보장을 위한 공공재정 재건
	② 공공비용을 위한 구조적 개혁 지속
	③ 정부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구조
	④ 상법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한 개선
	⑤ 정부차원의 전망과 평가를 위한 협의체 마련
	⑥ EU 차원의 경쟁관련 공공평가활동에 독립 전문가 참여

자료: Premier Minsitre(2012).